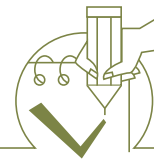


## 메가 FTA 전망 및 활용방안

김한성 교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20세기 들어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전세계 통상의 새로운 질서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전의 자유무역협정이 주로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개도국 간의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유무역협정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기존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개방에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까지 활발하게 FTA 체결에 참여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양자 혹은 다자간 체결된 FTA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WTO 통보 건수를 기준으로 1990년 이전까지 100여 개에 불과했던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은 2000년에는 300여 개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총 612개의 RTA가 보고되었고 이 중 406개의 RTA가 발효되어 있다.<sup>①</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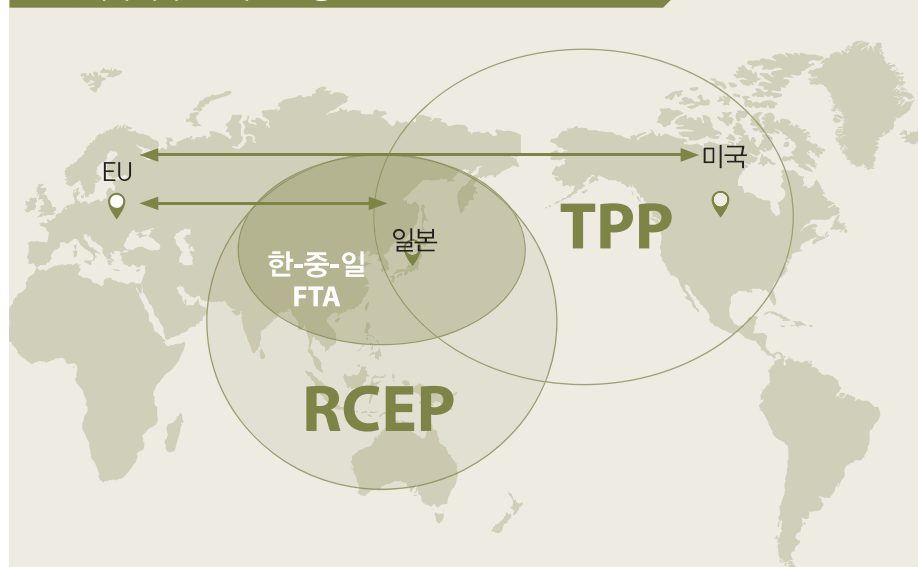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FTA의 확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냉전 종식과 함께 지역 내의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여 역내국과의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WTO DDA 협상이 타결 예정기간을 넘겨 장기화되면서 FTA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① WTO 웹사이트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2015년 11월 23일 검색.

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경쟁국의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ASEAN과 중국, 한국, 일본이 연이어 FTA를 체결한 점이나, 중-호주 FTA 협상 개시 후, 일-호주 FTA와 한-호주 FTA가 연달아 협상개시가 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FTA 확산이 신흥개도국 간의 혹은 개도국-선진국 간의 FTA가 주를 이루었다면, Mega-FTA라 불리는 거대 경제권 간의 FTA 추진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과 EU가 추진하고 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EU와 일본 간의 FTA,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에 추진되는 한-중-일 FTA, ASEAN과 주변 6개국 간에 추진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이 Mega-FTA로 거론된다.

#### ● 전세계 메가 FTA 추진 현황



이미 타결된 TPP를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대경제권 간의 FTA가 타결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EU 간의 TTIP는 전 세계 GDP의 46.2%와 전세계 무역의 41.9%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동 FTA의 타결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 경제블록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도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0%의 인구를 포함하고 전세계 GDP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7%와 29.0%에 이르는 통상협정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RCEP과 한-중-일 FTA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TPP에도 '관심'을 표명한 상태로 국내적으로 TPP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주요 지역무역협정 비교〉

구분		EU	NAFTA	TTIP	EU-일	TPP	RCEP	한-중-일
인구	규모(억 명)	5.1	4.7	8.2	6.3	8.5	34.2	15.3
	對세계비중(%)	7.1	6.6	11.5	8.9	11.9	48.0	21.5
GDP	규모(조 달러)	17.4	19.9	34.2	22.3	29.0	21.3	15.3
	對세계비중(%)	23.5	26.9	46.2	30.1	39.2	28.7	20.7
무역	규모(조 달러)	11.6	5.6	15.5	13.2	10.6	10.7	6.8
	對세계비중(%)	31.5	15.2	41.9	35.6	28.7	29.0	18.4

자료: UNCTAD

## 메가FTA의 등장 배경

메가 FTA의 등장은 관련 국가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외교적 이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소위 4대 경제권이라 불리는 미국, 중국, EU, 일본 중, 미국과 EU는 전통적으로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거대 경제권 간의 FTA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경

---

제적 요인보다는 주로 정치·외교적 요인이 FTA 추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일본은 자국 농축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이유로 자유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고, 중국도 선진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제조업 선진국과의 FTA를 꺼려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2006년 EU는 신통상정책인 ‘글로벌 유럽’을 수립하면서 제2세대 FTA라 불리는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게 된다. 기존에 EU의 FTA 상대국은 주로 저개발국이나 과거 식민지국가를 위주로 자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일방적 개방에 가까운 FTA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6년 제2세대 FTA에서는 EU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한국과 한-EU FTA를 시작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정책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TPP는 미국의 수출확대라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시장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정치·외교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역내에서 자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역내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RCEP을 추진하고 있다. RCEP은 ASEAN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통상협정으로, 중국은 최근까지도 일본이 제안한 ASEAN+6 형태의 경제통합방식보다는 ASEAN과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ASEAN+3 방식으로의 경제통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TPP를 앞세운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 정부는 ASEAN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RCEP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였고 동아시아 역내의 통상협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메가FTA 협상동향

이러한 주요국들을 둘러싼 정치·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는 이전에는 추진된 선례가 없었던 Mega-FTA가 발현되는 계기가 되었고, TPP가 지난 2015년 10월4일 타결되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 총 12개국이 참여한 TPP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부터 베트남, 페루 등 신흥개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정도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면서 타결 가능성과 협상 수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협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합의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각국의 비준과정을 거쳐 발효에 들어갈 예정인데, 동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이 목표했던 바와 같이 명실 공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가 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와 미국간의 FTA인 TTIP는 2013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협상이 완료되었다. 당초 201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신속한 협상타결 의지를 보였으나, 현재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인 2017년 1월까지도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의 또 다른 Mega FTA인 EU·일본 FTA는 2012년 11월 EU 이사회가 협상을 승인하면서 추진되어, 2013년 4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5년 9월까지 총 12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동 협상에서 EU는 일본의 관세보다는 일본시장 특유의 시장구조 및 비관세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여부를 FTA 협상의 유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2015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협상 서명 후 비준까지 약 1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17년 정도에 협정이 발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추진되는 RCEP은 2012년 11월 개시선언을 하면서 2015년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2013년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까지 총 10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일차 목표로 삼았던 2015년 타결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발전 스펙트럼과 농업강

국에서 제조업 강국까지 상이한 산업구조,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은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협상은 목표시한을 넘기고 있으나 참여국들이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TPP 타결에 자극 받은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등은 향후 동 협상의 타결 전망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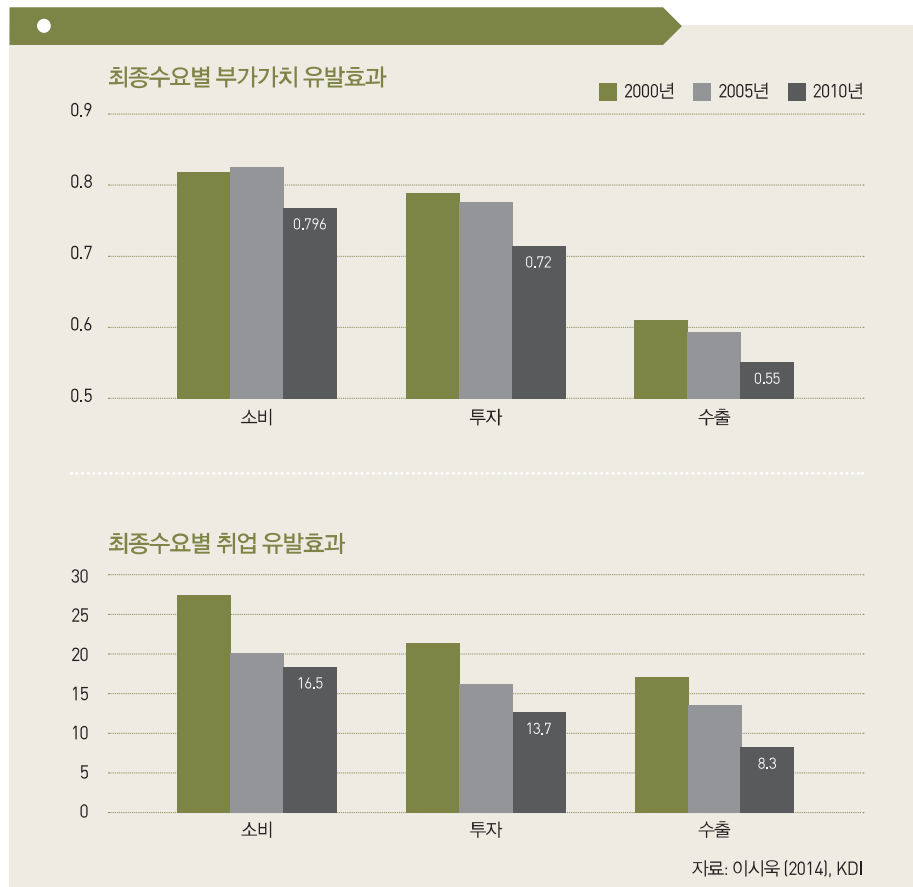
## 메가 FTA 시대에 대한 대응방향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FTA는 우리나라 통상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었고, 현재 총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2015년 타결된 한-중 FTA로 우리나라는 우리의 5대 교역대상국/지역 중,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타결된 FTA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0%에 달한다. FTA 후발참여국으로 출발하여 적극적인 FTA 추진전략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동아시아 FTA 허브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Mega-FTA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EU 간에 협의되고 있는 TTIP와 EU·일본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발효된 한-미 FTA와 한-EU FTA로 미국이나 EU 시장에 대한 수출 감소는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특혜관세에 따른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미국과 EU 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 5대 교역대상/국가 중에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시장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타결된 FTA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일본의 비농산품 MFN 관세가 1.2%로 미국(2.0%)이나 EU(2.2%)보다도 낮고 선진국 중에서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에 다자간에 진행되는 Mega-FTA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 축(linchpin)의 역할’을 한다는 통상전략 하에 지역통합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나 TPP 불참은 이러한 우리나라 통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물론 TPP 참여 12개국 중, 이미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TPP로 파급된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제생산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낙오된다는 것은 향후 커다란 불이익이 되어 다가올 수 있으며, 역내 통합과정에서 일본에 ‘linchpin’의 역할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TPP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TPP를 단순한 또 하나의 FTA가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이며 경제통합의 과정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RCEP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통상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GDP 대비 수출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1~12년 기간 중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53.0%에 달해 민간소비(24.6%), 정부소비 13.4%), 투자(9.0%)의 성장기여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과는 달리 수출의 질적인 측면에서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도는 1995년 76.3%에서 2010년에는 59.6%로 19.7% 포인트나 하락하였고, 수출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8.3명을 기록하면서 2000년에 비해 절반 이상 하락하였다. FTA가 우리나라 수출의 양적 팽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왔으나 질적인 측면까지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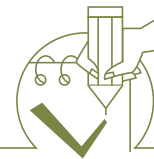


Mega-FTA의 추진과 함께 국제통상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간 자본이동의 확대와 국제생산분화의 심화, 국제소비시장에서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의 격화 등은 향후 통상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고려하면서 단순히 무역의 양적인 팽창이 우선되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상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Mega-FTA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메가 FTA 부상과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

김지선 수석연구원 / 포스코경영연구원



지난 10월 5일,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다. TPP가 발효되면 세계 인구의 약 11%, GDP의 약 37%, 교역의 약 27%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한다.



다자간통상체제를 주도해 온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최근 들어 주요국을 아우르는 메가 FTA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아태지역 12개국의 TPP를 비롯,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등 다수의 메가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질서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의 축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 하에서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 통합 논의가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TPP 외에 중국 주도로 한국, 일본,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간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원 21개국을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에 대한 사전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메가 FTA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주요국들을 포함하고 있어 타결 시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의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일명 도하라운드) 협상이 지난 2001년 개시 이후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 FTA의 부상은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진행 중인 주요 메가 FTA 현황〉

구분	TPP	RCEP	한중일 FTA	FTAAP
추진배경	아태지역 경제통합 위한 플랫폼	아시아 지역 세계 경제위상 제고	안정적 정치경제 협력 체제 구축	APEC 국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참가국	12개국: 미국,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캐나다, 일본, 페루,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TPP 참여 고려 중	16개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10개국)	3개국: 한국, 중국, 일본	21개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타이페이, 미국, 베트남
경제적 위상 (對세계, '13)	GDP 37% 인구 11% 수출입 27%	GDP 28% 인구 48% 수출입 31%	GDP 20% 인구 22% 수출입 20%	GDP 56% 인구 39% 수출입 49%
협상전망	'15.10월 초 타결 선언	2013년 5월 이후 10차례 협상 진행 ( '15.10월 기준)	2012년 이후 각 8차례 수석대표 / 실무협상 진행	공동 연구 중
(예상) 개방수준	高	中 또는 低	中 또는 低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데이터베이스 등 정리

## TPP,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

지난 10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TPP 12개국 통상장관회의('15.9.30~10.5)에서 마지막 쟁점사항이었던 자동차, 지재산권, 유제품 분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서 TPP 협상 타결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지난 11월 초 공개된 TPP 협정문에 따르면 관세의 경우 품목 수 기준 전체 약 95~100%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공산품의 경우 회원국 12개국 중 호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참가국에서 최장 30년에 걸쳐 100% 품목에서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복수국 간 FTA의 경우 국가 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양자간 FTA 대비 시장개방수준이 낮은 편인데, TPP의 경우 상품 분야를 비롯한 포괄적인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이끌어내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TPP는 전통적으로 FTA에서 다루었던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의 부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역할 등 차세대 이슈를 망라하며 '21세기형 FTA'를 표방하고 있다.

〈TPP 국가별 양허 현황(품목 수 기준)〉

구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전체	100%	95%	99%	100%	99%	100%
공산품	100%	100%	100%	99.8%	99.6%	100%

구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전체	100%	100%	99%	100%	100%	100%
공산품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5.11)

TPP에서 주목할 부분은 TPP 관세 혜택 여부를 평가할 원산지 기준으로 역내 생산 혹은 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누적”기준이란 체약국이 원산지인 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판정을 받은 재료에 대해서도 그 재료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나 공정을

최종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원산지 기준 도입으로 TPP 역내 국가 간 원부자재 공급과 투자가 촉진되어 역내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 FTA 우선 타결 등을 이유로 TPP 원년 멤버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후 개별 참여국과 예비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201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TPP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로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국회 비준 절차 진행 중) TPP 미참여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FTA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누려온 관세 혜택 등의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다수 품목에서 수출경합도가 높은 편으로 일본의 TPP 가입으로 일본산 제품 가격경쟁력의 제고와 이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TPP 누적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기존에 한국에서 공급받던 소재와 부품이 역내 국가 조달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의 TPP 참가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미국 등 TPP 참여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 對 TPP 교역규모(전체 교역의 약 34%, 2014년 기준) 등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TPP 참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참여할 경우 우리 측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협정문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더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TPP 가입을 염두에 두었다면 협상에 일찍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실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는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TPP는 세계 GDP의 36%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거대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TPP 협상 타결 직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며 TPP를 통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사한 바 있는데, 아태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TPP 참여 여부에 따른 우리나라 기대영향〉

구분	기대영향	
	긍정적	부정적
TPP 참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멕시코 등 FTA 미체결국과의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확대 및 교역 환경 개선</li> <li>- 시장개방수준이 낮았던 기체결 FTA 효과 개선</li> <li>- 역내 공급망 강화로 수출 및 생산 확대</li> <li>- 누적원산지 기준 적용으로 TPP 미가입 국가 수출 물량 참가국 전환 효과 및 원산지기준 충족 용이</li> <li>- 역내 투자 및 현지 생산환경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시장개방으로 부품, 자동차 등 일본이 우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 우려</li> <li>- 농수산물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에서의 수입 증가 우려</li> <li>- TPP와 기존 FTA 중 유리한 FTA 활용이 가능하나 FTA 간 비교 등 부담 존재</li> </ul>
TPP 불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시장 추가 개방 부담 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PP 참여국 대비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li> <li>- TPP 내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중간재 수입선을 한국에서 일본 등 다른 TPP 참여국으로 전환할 가능성 존재</li> </ul>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POSRI 등

## RCEP, 아시아 지역의 세계 경제 위상 제고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과 중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SEAN 및 이들과 FTA를 체결한 6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통한 통합 경제체제 구축을 모색 중에 있다. 2013년 5월 이후 현재(2015년 10월 기준)까지 총 10차례의 RCEP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RCEP은 상품,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국가별 예외 인정,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점진적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어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간 FTA나 TPP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RCEP 협상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한 바, RCEP 체결에 따른 추가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RCEP을 통해 역내 안정적 교역과 투자 기반 강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된 원산지규정 적용이 합의될 경우 기존에 다른 참가국들과 체결한 FTA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협정문 내 각 챕터별 포함해야 할 요소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동일 품목에 대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의 통일,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수준 등에서 선·개도국 간 의견 차이가 있어 현재까지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RCEP 16개국 정상들이 'RCEP 정상공동선언문'을 채택, RCEP 협상을 201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RCEP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RCEP 협상개요〉

구분	주요내용
개요	- '12.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RCEP 협상 개시 선언. '13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현재('15.10월 기준)까지 10차례 협상 완료
참가국	-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국
협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시장자유화 협상의 기반이 되는 기본지침 논의. 현재 1차 양허안의 수준 합의</li> <li>-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 및 협정문 포함 요소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 진행</li> <li>- [규범/협력] 5개 작업반(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및 4개 소작업반(원산지, 통관, SPS*, STRACAP**) 작업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li> <li>** STRACAP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규격,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체계</li> </ul> </li> </ul>
주요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의 정합성 유지 및 연계</li> <li>- 동일한 품목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기준 통일 문제</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분석내용 (2012년)</li> <li>- [실질 GDP] 발효 시 우리나라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8~0.68%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li> <li>- [후생] 발효 시 우리나라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li> </ul>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POSRI 등



## 한-중-일 FTA, 안정적 정치·경제 협력체제 구축

한-중-일 3국은 안정적 경제, 정치적 협력 관계의 제도적 토대는 물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2012년 3국 간 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후 현재(2015년 10월 기준)까지 각 8차례의 수석대표 협상과 실무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한-중-일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경쟁, 지적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협정 대상 및 범위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3국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정치·경제에서의 위상,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는 물론 GDP와 후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일 FTA 타결 시 중장기(10년)적으로 실질 GDP는 최대 약 1.5%, 후생은 약 163.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난 11월 1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한-중-일 3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 3국을 포함한 RCEP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협상 타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메가 FTA 부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이러한 메가 FTA 확대는 우리나라 통상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발표, 기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TPP와 RCEP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논의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통상정책 전략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TPP 타결을 기점으로 다수의 메가 FTA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

TPP의 경우, 현재 정부는 추후 가입을 염두에 두고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연 ‘TPP 전략포럼’ 발족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일본, 멕시코 등 FTA 미체결국과의 FTA 체결 효과, 기체결 FTA의 업그레이드, 역내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기는 하나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도 상존한다. 이미 양자 FTA가 체결된 국가들이더라도 TPP 개방수준이 기존 FTA 보다 높을 경우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한데 농수산물 수출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의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우위에 있는 기계, 부품, 자동차 품목들의 국내 수입 증가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PP 후발 참여 시 가입조건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여건들과 우리나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와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논의를 보다 강화하고 농축수산업 등 민감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메가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전략방향 수립이 중요하다.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 뿐 만 아니라 TPP, 그리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 한-중-일 FTA, FTAAP 등 메가 FTA 간 역학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협상전략은 물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메가 FTA 체결로 역내 분업구조의 개편과 공급망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들은 이들 FTA 체결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누적 원산지기준 적용 등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현지 생산체제에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예를 들면 TPP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혹은 해외 제조업체

---

들의 경우 TPP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TPP 참여국에서의 마케팅 기반 사전 확보 노력과 역내 투자 및 생산거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FTA 체결에 따라 원산지 증명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철저한 원산지 증명 관리와 관련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 20년 간 세계통상질서를 관장해 온 WTO의 다자간무역협상인 DDA가 2001년 협상 시작 이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다자간 체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12월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앞으로의 DDA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인데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가 FTA가 WTO 다자간무역체제에 보완적 역할을 할지 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지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메가 FTA가 한동안 세계 통상질서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매김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메가 FTA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통합 움직임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역량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자료]

#####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TPP 협정문 설명자료' 2015.1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Trade Brief No. 54, 2015.11.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 및 전망", Trade Brief No. 81, 2014.12.30  
 김지선, '무역수지 2억~3억 달러 개선 기대, 파급영향 커 전략 균형 필요', 포스코경영연구원 컨디언플러스 2015년 10월호  
 김지선, 유승록 'TPP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2015.10  
 김지선, 유승록 '메가 FTA, 아시아 경제 지도 바꾼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2015.2  
 KOTRA,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5-003, 2015.01.02  
 산업통상자원부 외,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포럼 발표자료), 2013.08.30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2014  
 Jeffrey J. Schott, 'Korea and the TPP: The Inevitable Partnership',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5.8

#####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World Bank 데이터베이스 (<http://data.worldbank.org/>)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데이터베이스 (<http://wits.worldbank.org/>)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웹사이트 ([www.ustr.gov](http://www.ustr.gov))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ww.piie.com](http://www.piie.com))

## 메가 FTA 동향과 전망

김영귀 팀장, 강민지 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 10월 5일,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로써 전 세계 경제규모의 37.1%와 교역의 25.8%를 차지하는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TPP와 같이 다수의 국가 또는 거대 경제권간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메가 FTA라 부른다. 최근 타결된 TPP를 포함하여 미국과 EU간 협상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과 아세안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 중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R: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이 대표적인 메가 FTA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메가 FTA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메가FTA의 등장배경

메가 FTA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진행 중인 다자협상의 지연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좀처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다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교역국들 간의 양자 FTA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각기 다른 원산지규정을 채택하다 보니 이를 이해하고 인증 및 검증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나타나면서 두서너 개 국가끼리 하던 종전의 FTA가 아니라 적어도 십 수개 이상의 국가가 모여서 거대 FTA를 형성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통상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2001년 시작된 DDA협상 의제에서는 빠져 있고 양자 FTA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무역이슈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신통상규범 제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가 모여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메가 FTA의 등장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운송·통신 수단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GVC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상(Conception)단계에서 생산(Production),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뤄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가치창출이 여러 국가를 거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무역장벽은 중간재 조달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 걸쳐 있는 가치사슬 구조는 양자 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충분한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FTA 논의가 필요해졌다. 더불어, GVC의 발달로 교역이나 투자장벽의 완화뿐 아니라 가치사슬에 참여 중인 국가들의 투명성 제고도 중요한 무역의제가 되었다.

## 메가 FTA의 동향

사실 아직까지 메가 FTA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TPP, RCEP 및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메가 FTA로 분류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며, 관점에 따라서는 TTIP, 한-중-일 FTA,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표 1〉 주요 메가 FTA의 참여국과 경제현황

Mega FTA	국토면적 (천 km <sup>2</sup> )	인구 (백만명)	명목 GDP (십억달러)	대세계교역 (십억달러)
<b>TPP</b>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12개국)	31,163.2	799.0 〈11.4〉	27,718.9 〈37.1〉	9,489.4 〈25.8〉
<b>RCEP</b>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개국)	25,094.8	3,421.4 〈48.7〉	21,646.9 〈29.0〉	10,671.9 〈29.0〉
<b>FTAAP</b>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21개국)	60,136.3	2,805.3 〈39.9〉	42,897.4 〈57.4〉	17,531.3 〈47.6〉
<b>TTIP</b> EU 28개국, 미국 (29개국)	13,384.0	822.1 〈11.7〉	34,280.2 〈45.8〉	15,479.3 〈42.1〉
<b>한중일 FTA</b>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9,850.2	1,538.3 〈21.9〉	15,672.1 〈21.0〉	6,779.6 〈18.4〉
<b>EEU</b>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	19,499.8	179.3 〈2.6〉	2,418.0 〈3.2〉	1,057.2 〈2.9〉
<b>PA</b>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4개국)	5,128.0	218.7 〈3.1〉	2,168.3 〈2.9〉	1,193.0 〈3.2〉

주1: 〈〉 안은 대세계 비중(%) 자료: IMF, UNCTAD (2013년 기준), KITA에서 재인용

TPP는 2010년 1차 협상 개시 이후 약 5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9월말 애틀랜타 각료회의에서 연장을 거듭한 끝에 2015년 10월 5일에 타결되었다. TPP는 원서명국 모두가 국내 법적 절차를 마친 뒤 60일이 지나면 발효될 예정이다. 만약 2년이 지나도록 협정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에는 TPP 참여국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을 완료한 때부터 60일 후에 비준 완료 국가들에 대해서만 발효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략 2017년 전후로 TP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세안과 아태지역 6개국(한-중-일-인-호-뉴)이 협상하고 있는 RCEP은 지난 201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개시 선언 후 지금까지 10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가 열렸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탄력을 받아 2016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이 정상선언문에 담겼으나, 개도국에 대한 예외와 인도의 보호주의로 인해 TPP 수준의 높은 시장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TAAP는 지난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FTAAP 논의를 통합한 베이징 로드맵이 채택되면서 급물살을 탔고, 2015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이행을 위한 공동연구를 내년 말에 열릴 정상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미국과 EU 간 FTA인 TTIP는 TPP 종료 이후 그 진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EEA 및 PA도 확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 메가FTA의 특징

메가 FTA는 공통적으로 참여국들의 기존 FTA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양자간·다자간의 복잡한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타결되면 경제규모 및 교역량에 있어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양자 FTA보다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

또한 역내 공급사슬구조가 강화되면서 메가 FTA에 속한 국가들은 원산지 공급망에 포함되어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수출증대 등의 이익을 누릴 것이나 이에 속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무역감소, 투자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의 특성상 누적원산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적기준은 그 형태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누적(Bilateral Accumulation)은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부품이나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해당 부품이나 재료를 자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는 양자누적을 채택하고 있다.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은 서로 다른 3국(FTA 대상국이 아닌 국가도 포함) 이상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누적기준이다. 예를 들어, 한-캐나다 FTA에서 자동차 생산에 사용된 미국산 재료에 대해서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은 역내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 및 공정 모두를 누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사누적이 국경 통과 시 제품의 원산지가 확정되어 있는데 반해, 완전누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완전누적은 Chase-up 방식으로 생산 단계 별로 포함된 재료와 수행공정의 역내산 비율이 합쳐져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는바 역내산 원산지판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TPP는 완전누적을 도입하여 역내 공급망(Regional Supply Chain)을 강화하고 역내 분업을 활성화하여 역내국의 무역 및 투자 촉진을 꾀하고 있다.

다른 특징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메가 FTA는 기존 WTO 다자 간 체제하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새로운 무역 이슈를 다룬다는 점이다. 최근에 협정문이 공개된 TPP의 경우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시장 접근과 관련된 기존 이슈뿐 아니라, 차세대 신규 무역이슈로 등장한 전자상거래, ICT와 같은

---



디지털 경제, 녹색기술 등과 관련된 첨단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자 간 체제 하에서는 각국의 참여한 이견 대립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환경, 노동 등의 무역이슈를 포함하는 등 신통상규범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표 2〉 TPP 포함 내용

제 1장 최초조항과 일반 정의	제16장 경쟁정책
제 2장 상품 무역	제17장 국영기업(SOE)과 지정독점
제 3장 섬유 및 의류	제18장 지식재산권
제 4장 원산지규정	제19장 노동
제 5장 관세 행정과 무역원활화	제20장 환경
제 6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제21장 협력 및 역량 강화
제 7장 기술무역장벽(TBT)	제22장 경쟁 및 사업 촉진
제 8장 무역구제	제23장 개발
제 9장 투자	제24장 중소기업
제10장 국경간 서비스	제25장 규제 정합성
제11장 금융서비스	제26장 투명성과 반부패
제12장 사업인력의 일시입국	제27장 행정 및 제도 관련 규정
제13장 통신	제28장 분쟁해결
제14장 전자상거래	제29장 예외
제15장 정부조달	제30장 최종조항

TTIP에서도 국제경제법의 규범설정력(Rule-Setting Power)을 가진 미국과 EU가 합의를 거쳐 신통상규범을 마련한다면 향후 세계 통상질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RCEP은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에 대한 개도국 배려원칙에 따라 TPP보다 신통상규범과 관련된 성과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과 경제개발을 연계하는 다자적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메가 FTA의 전망

한쪽에서 메가 FTA 논의가 본격화되면 역외국 입장에서는 무역전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집단적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메가 FTA를 탄생시키게 된다.

이렇게 상호 견제와 경쟁을 통해 메가 FTA는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TPP가 타결되면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되기 위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가치사슬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도미노처럼 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여러 메가 FTA의 통합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단일한 세계무역질서를 단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메가 FTA의 확산은 WTO 체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메가 FTA의 체결로 혜택을 입고 있는 국가는 다자적인 무역자유화 협상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며, 이미 익숙해진 지역내 통상규범이 다자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해 수정되어야 할 경우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WTO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타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메가 FTA와 WTO 협상 간의 관계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메가 FTA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까지 양자 FTA 위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한국도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가 FTA에 대비한 통상정책 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한국과 메가 FTA

그 동안 한국은 주로 양자 FTA를 통해 통상환경을 개선해 왔으나, 대외개방도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도가 높은 만큼 새로운 통상질서를 제시하는 메가 FTA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우선 최근 타결된 TPP의 경우, 그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영향을 따져 보고 국내 절차를 거쳐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TPP 참여국 중에서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TPP의 가입은 TPP 12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기존에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도 양자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기존 FTA의 이행에 대한 검토 작업 및 비시장개방 품목에 대한 FTA 업그레이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TPP에 새로이 추가된 수산보조금, 국영기업(SOE), 환율 등의 규정과의 합치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CEP의 경우 한국 정부는 상품, 서비스 등 시장접근 협상 및 분과별 협상을 가속화해 2016년에는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 특히 RCEP의 경우 중국, 일본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형성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틀을 잘 구축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메가FTA의 활용

우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메가 FTA를 활용할 수 있다. TPP는 무역협정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규정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이 FTA 이익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완전누적을 통해 가치사슬에 편입됨으로써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생산흐름이 다 파악되는 Chase-up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므로 원산지 전산화 등을 통한 원산지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메가 FTA를 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발달하면서 메가 FTA의 파급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생산단계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메가 FTA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혁신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새로운 통상규범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중소기업들이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